

“화생방 방독면 어디에?”

이정린 도의원,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전북도의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민방위대 장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로 지적되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직장민방위대의 장비 확보 기준은 민방위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



를 대원수에 따른 소요개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 민방위 대원 1인 1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장사항으로 공공행정기관일 경우 정원기준에 따라 공무원 1인당 1개를 확보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청 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 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화생방 방독면의 이것도 무려 33년 전인 1986년에 제조된 것으로 내구연한(5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재 도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린 의원은 “민약 도청에 화생방 테러가 일어날 경우 도청 직원들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꼼짝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민방위 사태에서 주민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심에서,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조직과 사람들이 도청과 시군청의 공무원일 텐데 불구하고 도와 시군 직장민방위대의 장비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을 상대로 “당장 도, 시군 직장민방위대 장비 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하루속히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방독면은 공무원 1인 1개를 구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법무부, 文대통령에 검찰개혁 첫 직보... “감찰 강화 연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검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 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검찰 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 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에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가 법무감찰 개혁위원회, 검찰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들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 검찰 개혁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김 차관은 면담 이후 첫 보고를 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보고에 김 차관과 이성운 법무부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박용근 의원,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 강화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이 11일 열린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북도 공무원징계 발생비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8년도 사법기관 통보 전라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건중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은 감봉이 2~3개월에 그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인 뇌물사건, 사기 등 여러 사건으로 해임된 사례도 4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징계는 받지 않았으나 강제휴직, 폭행, 특수협박으로 검찰로부

터 통보받은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공무원들의 도민에 대한 복무 태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총 21건으로 음주운전 4건, 음주측정거부 1건, 강제추행 등 비위 내용도 다양화되고 발생빈도 또한 전혀 줄지 않아 개선 사항이 없다”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과 특단의 대책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조직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감사관실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文대통령, 임기 후반기 맞아 각오와 다짐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2년 남은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에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남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려 노력했다”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

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리는 불편함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며 “그 길을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던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하게 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라며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기적같은 변화도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결과를 정량하거나 나눌 수 없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을 것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담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도의회 교육위, “교육현장서 발생된 문제점 각성해야”

전라북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1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 도교육청 상대 정책 질의에서 교사와 그 자녀에 대한 소피제와 대안교육위탁기관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문제점을 집중지적하며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우리 전북에서도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상피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심각함을 인지하고 상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북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내년 신학기부터 전주시라도 상피제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이라며 질타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최근 전국에 보도될 정도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학교폭력예방 지침이 일선학교에 전달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SNS 등 학생들의 표현 방식이 옛날과 달라져도 지도해주고,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직속기관 명칭변경은 도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